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올해 첫 임시총회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12일 평창 용평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 제1회 임시총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2018평창동계올림픽 응원단 구성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건협 강원도회, 임시총회… 추경예산안 등 처리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는 12일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 그랜드 볼룸에서 2017년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새로 선출된 도회 대표회원 간 상견

례와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처리됐다. 아울러 도회는 2018 평창동계 올림픽 회원사 응원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오는 9월 단체 입장권을 구매할 계획이다.

“부실공사 막는 지름길은 적정공사비 확보”

“최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역 다툼은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부실공사의 우려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책임 있는 건설업계의 구성원으로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해 상생 방안을 찾으려 합니다.”

배인호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장은 건설산업의 개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답했다. 공공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 소방설비 등을 두고 종합과 전문건설업체의 다툼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

배 회장은 “종합건설업체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에 책임을 지고 시공한다. 그러나 분리발주는 이런 품질 유지 노력과 책임이 배제된다. 이는 결국 건설산업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악화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 함께 노력해 반드시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공사에서 적정공사비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건설업계에서 낙인처럼 따라붙는 부실공사 원인에는 물론 영세업자의 난립, 과당 경쟁 등 업계 자체의 문제도 있어 개선 방안이 강구돼야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려운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기연장 방지 △간접비 및 현장 유지비용의 인정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비 산정 시 제압비율 정상 반영 등이 업계 생존을 위해 절실히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 중심의 클러스터 조성에 기대를 걸었다. 경북 내 기존 산업들의 노후화, 생산기지 이전으로 인한 산업 공동화, 인구감소 문제가 역력하기 때문이다. 혁신 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 클러스터, 지역발전 견인
경주엔 원전해체센터 조성을
‘종합-전문’ 업역다툼 잡고
相生방안 모색, 공존해야**

를 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그는 원전해체연구센터의 경북 내 유치를 강조했다.

배 회장은 “원전해체연구센터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경주지역 원전연구기관 설치와 맞물려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 탈원전이 가시화하면 원전해체사업과 사후 산업은 향후 수십년간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열리는 것은 물론 안전성 확보와도 직결된다. 이를 위한 기술을 해외에 의존할 수 없을 뿐더러 울산, 부산 등 타 경쟁지역보다 당위성이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북은 전국 원전의 절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12기의 원전 중 6기가 위치해 있다. 게다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이 소재해 가장 많은 관련 인프라 시설을 보유한 향후 탈원전 정책의 최대 이해 관계자다. 그는 “탈원전 대책과 원전해체연구센터 등 관련 시설의 유치는 경북의 경제, 생존, 번영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장 시급한 건설현안으로는 영일만 횡단대교를 꼽았다.

이달 착공에 들어가는 동해안 고속도로(포항~영덕)가 ‘동해안 벨트’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건설된 울산~포항 고속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영일만 횡단대교가 필수라는 것이다. 하지만 1조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건설비가 예상돼 사업추진이 현 시점에서는 불투명하다.

배 회장은 “향후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와 영일신항 준공으로 막대한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연결되지 않고 국도를 우회하게 되면 말 그대로 혈관이 막히는 것과 다름없다. 장기적 사업기간 동안 사업비의 분산이 가능한 만큼 부산~울산~포항~영덕까지 이르는 600만 동해안 신성장 권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이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경북권의 대표적인 현안인 대구공항 이전사업에 대해서도 새 정부가 추진의지를 분명히 하기를 희망했다.

그는 “새 정부는 시민사회의 합의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이 적기에 실시될 수 있을지, 이 사업이 예산의 블랙홀이 되어 다른 사업들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불안을 하루빨리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북은 넓은 행정구역을 가진 반면, 정주 여건이 계속 악화되면서 인구 유출과 노령화로 인한 공동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 현실에 맞는 새로운 신사업과 청년 고용이 가능한 산업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정석한기자.jobize@